

[시티 & 피쳐]

■광주 시내 불법광고 요지경 실태

야한 전단지 도심 '도배' 내 아이가 볼까 두렵다

업주들 시민의식 부재 속 처벌은 '솜방망이'

휴일인 지난 25일 밤 9시경, 광주 충장로 거리는 '발디딜 틈'이 없었다. 휴일 분위기에 취한 젊은이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발디딜 곳이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인근 나이트 클럽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 때문이다.

사정은 충장로 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날 상무지구 역시 노래방이나 대리운전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들이 널려 있었다. 특히 상무지구를 포함해 모델들이 풀려 있는 윙봉지구·옛 호전 앞에는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이 실린 소형 전단지가 보는 이의 눈을 따갑게 했다.

나이트 클럽 등 유흥업소나 대리운전, 출장 안마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뿌려대는 불법 전단지에 광주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도로를 점거한 불법 광고물까지 포함하면 도심 미관의 사정은 '최악'이다.

광주 시 동구 충장로 일대를 청소하

는 미화원 박종식(57·광주 시 동구 용산동)씨는 "거의 매일 밤 길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도로 충장로, 콜박스, 구시정 일대가 모두 덮이다시피 된다"며 "심할 때는 100ℓ 용량의 관급 쓰레기 봉투 10개를 채우고도 모자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도시 미관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업주들의 시민의식 부재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비된 고정형 불법 광고물은 모두 3천645건이며,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 이동형 불법 광고물은 807만1천659건에 달한다.

"육의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고정형의 경우 적발된 업주는 돌려받는 대가로 광고물의 면적 및 크기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불법 전단지는 적발시 업주

가 1~10장은 장당 5천원, 11~20장은 장당 1만원, 21장 이상은 장당 1만5천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고정형 불법 광고물은 안 찾아가면 그만이고, 대부분 아르바이트에 의해 뿌려지는 이동형은 전단지에 업주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없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처벌은 거의 전무하다. 지난해 광주시에 단속된 2만8천138건 중 영점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이동형 불법 광고물 업주 14명만이 고발 조치됐다.

동구청 환경정소과 이문진씨는 "인력 부족 등 물리적 한계도 분명 존재하고, 모든 불법 광고물을 무작정 단속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맡은 바 임무에 따라 단속에 나서겠지만, 업주들의 시민의식이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불법 전단지 도배되다시피한 충장로의 밤거리. 시민들은 "발 디딜 틈 없이 뿌려진 나이트클럽 홍보 전단에 나체에 가까운 여성사진이 들어있어 애들 보기가 민망하다"고 말한다.

광주 환경산업 키운다

광(光)·디지털가전·기계부품 산업 등 첨단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광주를 21세기 유망산업인 환경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 환경정책과 이정삼 사무관은 27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제1회 환경포럼'에서 "정부가 실리콘밸리, 시스템 같은 해외 일류 혁신클러스터를 15년내에 2~3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광주시도 21세기 유망산업인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할 '환경혁신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도 광주의 경우 광촉매와 환경계측기기를 연계하는 것을 특화분야로 선정할 바 있다"며 "산자부의 2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2007~2011년)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해 장기적으로 광주·전남에 광역환경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은 광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은 "광주를 환경메카로 육성하려면 지역의 산업기반시설과 도심 발전축 등을 고려한 대규모 환경산업 집적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

이용은 광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은 "광주를 환경메카로 육성하려면 지역의 산업기반시설과 도심 발전축 등을 고려한 대규모 환경산업 집적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

이 사무관은 광주에서 육성할 유망 환경산업으로 ▲광산업 및 전자산업과 연계한 환경설비·제어계측산업 ▲국가차원에서 집중육성해야 할 자동차의 CO2감축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을 꼽았다.

그는 "단지적으로는 지역내 보유품 산업, 지역 특화산업인 광산업 업체 지원 등이 필요하며 환경산업 집적단지에는 환경특성화 국제거점 연구소 건립, 환경관련 대기업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환경산업 시장 규모(2005년)는 18조8천억원으로 연평균 11%가 성장하는 유망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광주지역은 188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술연구원 광대중 연구위원도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가 만든 '산업집적화확충기본계획'에서

로 조사됐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불법광고·쓰레기 투기 등 단속 실적 따라

광주시, 자치구 예산 차등 지원

광주시내 일선 자치구의 불법 광고물·불법주차·쓰레기 투기 등의 단속 실적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광주시는 27일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불법 광고물·쓰레기 투기·불법 주차 등 기초질서 문란 행위가 만연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구 평가제를 도입, 우수 자치구에 3억원

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질서지킴이 캠페인 ▲거리정소 ▲육의 광고물 정비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공중화장실 정비 ▲불법 주차차 단속 등 6개 과제다. 평가는 4월, 7월, 10월 3차례 진행된다.

불법 주차차 단속은 버스승강장·

교차로 등 교통체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확인한다. 불법 광고물은 주요 경기장 주변과 숙소, 성화봉송소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각 자치구들도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서구는 불법 광고물 설치·배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작 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내지 등록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동구도 버스 승강장 등지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예고 없이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무단방치·무등록 자동차

4월 한달동안 일제 단속

광주시는 4월 한달동안 무단방치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불법 자동차 신고 센터를 가동키로 했다.

시는 도로·주택가·이면도로와 공한지 등에 장기간 버려진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와 고전압 방전식 전조등(HID전조등),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자동차들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진처리 또는 강제처리 절차에 의하여 조치하는 한편, 불법구조변경자동차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명령,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문의:대중교통과(613-4543).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자/치/구/소/식

노인 가정 찾아가 건강관리

동구는 병원 방문이 힘든 노인들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노인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동구는 이를위해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환자의 요구를 먼저 파악할 방침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2천122세대다.

초등 1학년 결핵 예방접종

남구보건소는 28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결핵예방접종(BCG)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자는 BCG 미접종자 및 접종 후 반응검사서 음성이 나온 미 반응자로 학교와 일정 협의 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다.

예방 접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 보건소 예방접종실(650-7689)로 문의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달 29일까지 민방위교육

남구의 상반기 민방위 교육이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광주공원지하 민방위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에이즈 확인진단기관 선정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에이즈 검사 확인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에이즈 확인진단기관으로 지정돼 그 동안 최종 확인까지 30일 이상 소요되던 에이즈 검사를 7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에이즈검사는 그동안 보건소와 병·의원 등의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검체에 대해서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2차 검사를 의뢰했다. 또 연구원의 2차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의심되는 검체는 질병관리본부로 보내 확진 검사를 거쳤으며 최종 진단이 나오기까지는 약 30일이 소요됐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